“세수 늘었지만, 지방이 쓸 돈·결정권은 줄어”

서왕진 의원, 미래대응기금 설계 문제 제기

국세 40.7% 늘때 보통교부세 2% 증가

교부세 약 29조원 감소…재정 위축 우려

“재정 자율성·지방 의사결정 참여 보장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미래대응기금 설계를 놓고 지방재정 위축과 재정분권 후퇴 우려가 제기됐다. 국세수입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증가 폭은 미미한 데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도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결정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비례·**사진**)은 3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 우대’ 예산 원칙을 언급했지만, 지방재정 악화가 가장 큰 우려로 제기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배분 방식을 문제 삼았다.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과 지역 발전에 투자하겠다는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래를 위해 세수를 나눠 쓰겠다는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오늘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7년 국세수입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4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2%에 그친다. 정부가 법정 교부세율을 조정하지 않은 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기에 앞서 미래대응기금 몫을 우선 떼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산정 방식대로라면 약 97조2천억원에 달했을 보통교부세가 67조6천억원으로 줄어 약 29조6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서 의원은 추산했다. 올해 초과세수에 따라 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통교부세 약 10조5천억원 역시 기금으로 전입될 경우 지방에 배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기금 내 지역계정도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계정 15조3천억원 가운데 5조원은 당장 개별 사업에 배정되지 않은 여유자금이며, 나머지 사업에도 기존 회계에서 이관됐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사업 내용과 지원 조건 역시 상당 부분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여서 지방의 재정 운용 권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 악화가 지역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방재정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광주지역 학교급식비 169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교육청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급식과 주민의 이동권,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키는 민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미래대응기금의 설계와 운용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번 예산 국회에서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충 ▲지방의 재정 자율성 확대 ▲지방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 보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서 의원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의 재정을 줄이는 기금이 아니라 지방의 미래를 키우는 기금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 하단)와 정청래 의원(오른쪽 상단)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혁신당과 합당 놓고 또 내부 갈등

김민석 “당내투쟁 수단”·정청래 “가당치 않은 주장”

金 “당원 총의 응집돼야”…鄭 “말꼬리 잡지 마시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의 ‘내년 1월까지 합당’ 발언을 당내 투쟁의 수단이라고 비판하자, 정 전 대표가 즉각 반박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3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내년 1월까지는 혁신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정 전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 “선의의 통합과 진지한 논의 과정,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당내 투쟁 수단처럼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시한을 정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실제 합당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분이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합당 시한을 못 박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합당을 전제할 수도, 그 시기를 전제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당원 주권을 강조해 온 정 전 대표가 당원의 의사를 묻는 과정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통합과 연대를 기본 방향으로 진보 정당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혁신당과도 정책을 포함해 어느 수준까지 연대할 수 있을지를 담당자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재임하던 올해 초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무산된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당원 의견을 확인하고 수렴하는 과정과 별개로 일방적인 발표가 이뤄지고 절차가 무시된 것이 반발을 불렀다는 취지다.

그는 “합당이나 당 해산은 당원 주권에 따른 결정이며, 당원의 총의가 가장 응집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당내 투쟁’ 운운하시던데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며 “제 머릿속에는 없는 콘셉트”라고 일축했다.

당원 의사를 묻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김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도 “모든 것은 결국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결정 사항”이라며 “합당 절차에는 반드시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 찬성을 전제로 합당을 이야기했고, 당원들이 찬성해야 합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마치 당원 주권을 도외시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중요한 것은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통합이 없으면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말꼬리를 잡거나 말허리를 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민주, 내일 본회의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다”며 “원내에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말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하고 5일께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후 이달 중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이 이날 추가 의견을 수렴키로 함에 따라 일정이 전체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 ‘초광역특구 특위’ 결의안 의결

내년 1월30일까지 운영

국힘 의사진행 반대·퇴장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이른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심사한다.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등이 특위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며 특위 운영 기간은 내년 1월30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구성 결의안을 졸속으로 상정한 데 대해 절차적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집적된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의 퇴장이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수 기자

